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충청남도의회

의정토론회

주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더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듭니다



2019.07.08(월)

PM 15:00

논산문화원 다목적홀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

의정토론회 개요 및 흐름

■ 개요

- 일 시 : 2019. 7. 8.(월) 15:00 ~ 17:00
- 장 소 : 논산문화원 다목적홀
- 주 최 : 충청남도의회
- 주 제 :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올바른 방향 모색

■ 진행흐름

시 간		내 용	비 고
< 개 회 식 >			
15:00~15:05	05'	개 회 및 국 민 의 례	사회자 :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15:05~15:10	05'	인사말씀, 내빈소개 등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인환 의원
< 토 론 회 > ※ 좌 장 : 오인환 의원			
15:10~15:30	20'	주 제 발 표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장수찬 교수
15:30~16:20	50'	지 정 토 론	토론자 5명(각 10분)
16:20~16:40	20'	패 널 토 론	패널 간 자유토론
16:40~16:55	15'	청 중 토 론	참여자 전체
16:55~17:00	05'	정 리 및 폐 회	좌 장

차 례

■ 주제발표

- ▶ 충청남도 주민참여제도의 현황 및 과제 1
 - ◇ 장수찬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지정토론

-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적 한계 및
해결 방안과 향후 과제 15
 - ◇ 이광원 (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 연구교수)
- ▶ 충청남도민의 참여를 위한 예산학교가 필요하다 21
 - ◇ 김상기 (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 간사)
- ▶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바라보며 27
 - ◇ 김 구 (광석면 주민자치위원장)
- ▶ 충청남도 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31
 - ◇ 이존관 (충청남도 예산담당관)
- ▶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및 과제 43
 - ◇ 박찬해 (논산시 참여예산실장)

의정토론회

주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더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듭니다**

▣ 주제발표

【충남도 주민참여제도의 현황 및 과제】

장수찬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충남도 주민참여제도의 현황 및 과제

Porto Alegre Metro 440만, city 148만(2010년)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주민 54만 참여를 통한 혁신



장 수찬 (목원대학교)

납세가 있는 곳에 반드시 권한이 있다

1장

도민참여예산제: 충남과 서울시 사례

1. 시민참여예산제도와 기본목표 (평가기준표)
2. 광역 시도별 시민참여예산제도 비교분석
3. 충청남도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사례-조례, 운영

목차 contents



2장

도민감사관제: 충남과 서울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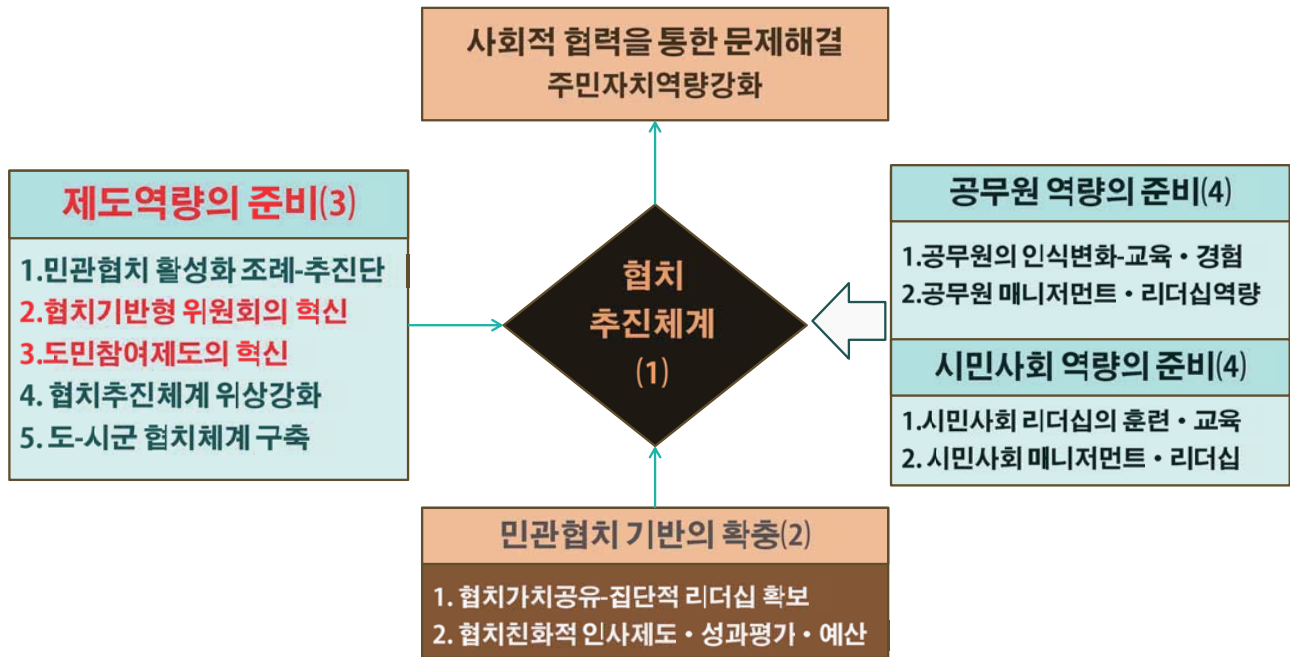
1. 도민감사관제 제도=대전시 VS 서울시
2. 제도차원의 비교-조례를 중심으로
3. 도민감사관제도 운영방식에 대한 비교 (1)
4. 도민감사관제도 운영 실태 비교 (2)

3장

거버넌스위원회(충남&서울): 자원봉사

1. 도정 자문위원회의 현황
2. 자문위원회와 시민참여수준
3. 자원봉사와 자문위원회: 거버넌스위원회 결핍
4. 자원봉사 거버넌스의 혁신

충남도 민·관 협치의 구조와 현황



주민참여예산제 개선을 위한 핵심실천과제

지향가치	주요관점 및 핵심실천과제
1. 주민참여 & 민주성	• 최대 다수 시민의 참여 • 시민의 수요·목소리·의견 최대한 수렴 및 반영 • 예산편성 의견의 동등 권한 행사(정치적 평등주의) • 예산의사결정의 민주적 절차 및 방법의 적용
2. 예산 투명성	• 예산운영 관련 정보의 적시, 적정방법, 단순 명료한 공개 • 참여예산주체 요구정보의 적극적 생성 및 공개 • 기타 재정정보의 시와 주민 간 상호소통, 지속적 주민 피드백
3. 재정 책임성	• 재정활동 내역에 대한 성실한 회계적 설명과 책임 • 주민과 약속한 각종 예산계획의 실행상태 입증 및 공개 • 세금의 경제적 가치구현 •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실현 • 참여예산 위원회 등 윤리현장 제정, 책임성 강화
4. 예산의 사회적 포용성	• 예산결정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보장 • 빈곤, 장애, 여성, 각종 사회적 약자의 재정수요 파악, 옹호, 실천 •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배려 예산 안배

주민참여예산제 평가기준표

참여기구	참여기구운영 평가기준
1. 참여예산위원회	예산위원들의 주민대표성 (공개모집비중) / 예산위원 중에 의회 추천자와 단체장 추천자가 차지하는 비중 민관합치적 방식으로 작동하는가 여부 (예산담당관실+민간 참여예산네트워크) =예산심의 및 결정권한 예산위원회 규모/예산위원회 회의(회의의 정기화, 빈번도) 분과위원회의 운영 여부, 분과위원회 활동량, 실국+예산분과위원회의 소통구조 및 역할
2. 참여예산연구회	예산연구회의 독자성, 예산지원협의회와의 관계 예산연구회의 전문성 수준 예산연구회가 참여예산제도를 지속적으로 혁신하는데 기여하는가 여부
3. 참여예산지원협의회	민관합치적으로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가? 참여예산협의회가 연구·조정·모니터링·평가 및 총괄 기능을 갖고 있는가? 예산협의회의 존재여부 및 역량 (전문성, 권한, 역할 및 위상)
4. 예산학교	예산학교의 정기성, 피교육자들에 대한 인센티브와 참여예산제도의 연계 예산학교 수강인원 및 수강대상(=일반시민) 예산학교와 관련하여 조례의 규정 여부
5. 지역회의	지역회의의 존재여부 지역회의와 예산위원회의 연계성 지역회의를 통한 예산제안서 제출 및 사업선정
6. 여론수렴제도	여론수렴과정의 공개성 및 투명성 여론수렴과정에서 주민참여수준 여론조사의 정기성 및 규모
7. 참여예산운영방식	참여예산일정의 정례화 -예산주기에 대한 도민인식 주민제안사업의 다층화 및 다양화 주민제안사업선정의 투명성, 민주성, 절차적 합리성/예산운영방식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포르토 알레그레 모델

동단위-구-시단위 예산회의-예산우선순위 (200million \$: 건설&서비스예산-전체예산의 21%)-예산투표실
시-평균5만명참여 (전체148만)-참여인원의확대-1월에 시작-대규모 대표자회의(1000명-동단위)-district
단위 42명대표자-예산자치위원회(조정)-결정사항binding -World Bank평가 학교숫자 4배증가, 하수도
수도 98% 개선-253개 브라질 자치정부가 참여예산모델사용



광역시도별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분석 비교(2016)

연번	시도	최근개정일	예산민관 지원협의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예산연구회	예산학교	참여예산범위 (실령제)
				위원회	분과위				
1	서울	17.07	규정(지원협의회)	300명 이내 (공모 275)	규정	규정	규정	규정(항시운영)	전체예산(700억)
2	부산	15.07	임의규정	100	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규정	전체예산
3	대구	18.07	-	100	규정	규정	-	규정	전체예산
4	인천	11.07	(민관협의회)	100(공모60)	규정	-	예산지원협의회	규칙	법정경비제외
5	광주	12.07	-	100(공모50)	규정	-	-	규정	120억
6	대전	15.12	-	70	규정	-	규정	규정	30억 이내
7	울산	15.06	-	50~70	규정	-	규정	규정	
8	경기	16.12	-	70(약자1/2)	규칙	규정	규정	규정	전체예산
9	강원	11.07	-	-	-	-	-	규정	
10	충북	18.04	임의규정	60 이내	규정	-	규정	규정	-
11	충남	18.03	-	40 이내	시행규칙	-	규정	(순회교육)	60억 행사부평가 광역시도 최우수기관 선정
12	전북	18.08	규칙	30	임의규칙	-	규정	규정	
13	전남	17.08	-	50~100	규정	-	규정	규정	
14	경북	11.09	-	임의규정	규정	-	지역연구회(임의)	규정	
15	경남	18.06	임의규정	50~100	임의규정		규정	규정	
16	제주	15.06	지역회의 조정협의	80	임의규정	유면동2000명	임의규정	규정	

충남도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구조

예산연구회가 예산실과 연결
도민참여제도와 협력적관계 無
예산학교와 위원회의 연결성부족

예산위원회 총회

총회는 년 3회
운영위원회(10명)는 년 2회
민간차원의 Control-tower 부족

예산연구회

순회예산교육

운영위원회

행정자치분과

10여명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공보관
공무원교육원
감사위원회
충남도립대학

문화복지분과

10여명
문화체육관광국
복지보건국
여성가족정책관
충남도립대학

농업경제환경분과

10여명
경제산업실
농정국
기후환경녹지국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건설해양소방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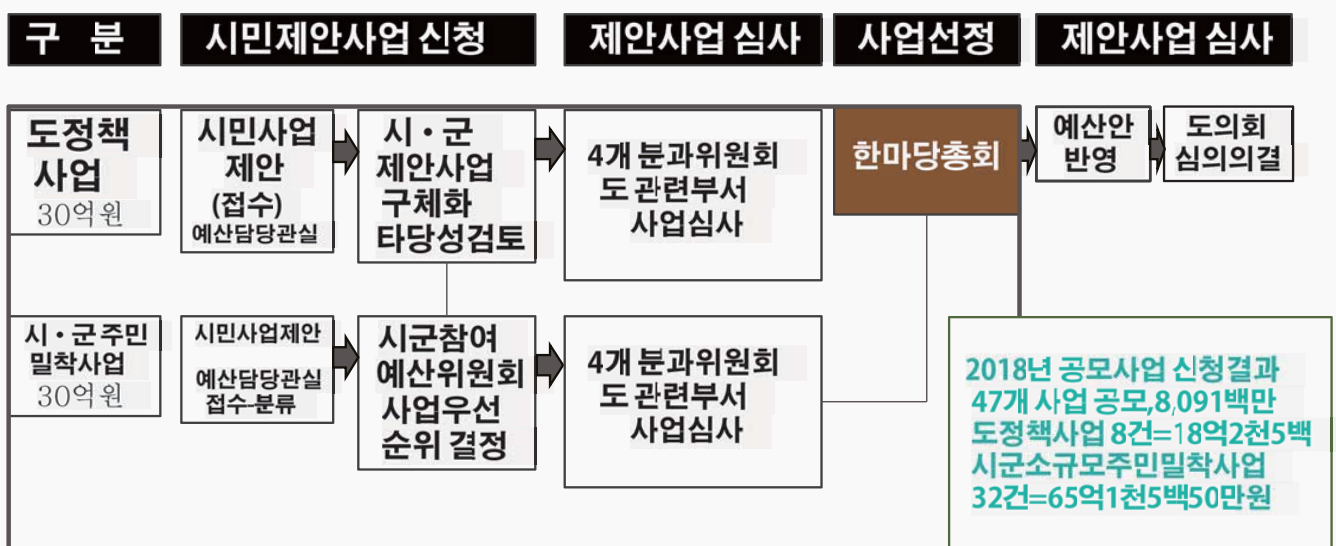
10여명
재난안전실
국토교통국
해양수산국
소방본부

분과위원회의 정시성부족
도 자체예산에 대한 영향력
분과별 활동 저조

실·국별 자체사업 도민참여예산제: 예산위원회 설명회 및 실·국 단위 자문위원회 예산회의

기구	핵심기능 및 역할
1. 예산위원회-총회	• 40명으로 구성(도지사 5명, 도의회 5명, 시·군 추천 15명, 공개모집 15명-도민대표성 부족) • 공개모집 부족(무작위 대표성-예산학교와 연결 부족) • 운영위원회 구성(민간전문가 8명, 예산담당관 2명)-민관협치기능 부족 • 예산위원회 총회 년3회, 운영위원회 년 2회-예산제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부족 • 다른 기구들 즉 예산학교, 예산연구회 등과의 연계활동부족 • 민관협치적 접근을 위한 예산네트워크(민간NGO)와의 협력구조 없음 • 참여예산 60억에 대한 결정권
2. 분과 위원회	(1) 4개 분과위원회 • 분과별 10명 위원으로 구성 • 도 전체예산 예산 편성의견제시, 예산평성한 조정의견 제시 • 결산의견제시, 사업 모니터링, 예산낭비 감사 (2) 4개 분과위원회 운영 • 2018년 년 1회 회의- • 참여예산제 만족도 조사/ 실국별 자문위원회 회의
3. 예산연구회	• 15명으로 구성 (제3기 -12명, 예산위원들의 참여구조 없음) • 임기 3년 (운영조례 시행규칙) • 도민참여제도를 뒷받침하기 보다 예산담당관실의 예산제 운영을 뒷받침 • 도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제도 연구 • 도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 및 자문 • 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 공청회 등 주민참여 활성화 연구 등
4. 예산학교	• 6월 중 시·군 순회 예산교육 실시-연중 교육실시 없음 • 1일 4시간 교육- 15개 시군 • 예산학교와 예산위원회 관계 설정이 없음 • 총 4시간 교육: 예산이해, 참여예산제, 예산제운영방식, 도정참여, 사업제안사례학습, 실습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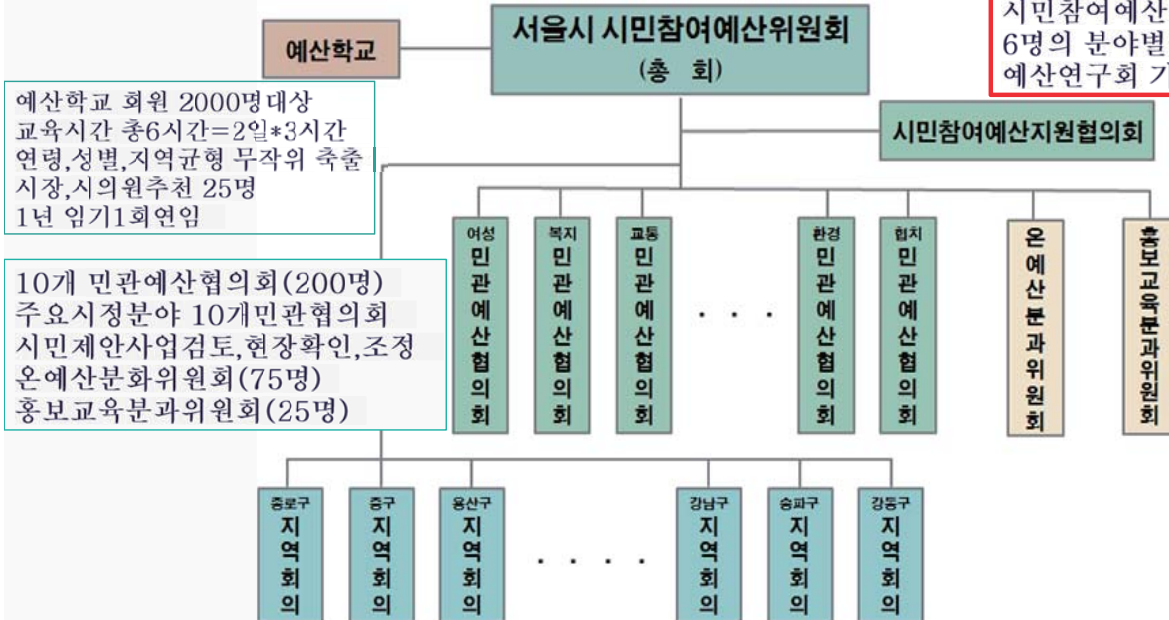
충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체계



참여예산제 평가: 제안사업의 경쟁 & 주민참여적 결정, 상호평가를 통한 사회적 학습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구조

30명으로 구성
매월 첫째, 셋째 주 화요일(월2회)
시민참여예산담당관
6명의 분야별 팀장참여+네트워크
예산연구회 기능-제도수정·보완



기구	핵심기능 및 역할
1. 민관예산협의회	10개 분야 민관예산협의회: 여성, 복지, 교통, 경제, 일자리, 문화관광, 환경, 도시안전, 공원 등 - 분야별로 약 27명: 참여예산위원 2/3이상, 전문가 3인, 공무원 4인 - 시민제안사업의 제안자 의견청취, 현장확인 등 - 사업심사시 토론하여 사업 구체화, 사업통폐합 실시 - 협의회별로 한도액의 약 130% 사업선정 총회보고 - 자치구 지원요청사업적격심사-부적격 사업제외
2. 기능분과 위원회	(1) 예산분과위원회 75명 내외, 5개 소분과, 소분과별 15명 - 시 전체예산 예산 편성의견제시, 예산평성한 조정의견 제시 - 결산의견제시, 사업 모니터링, 예산낭비 감사 - 자치구 참여예산제 운영 평가(지원등급결정) (2) 홍보·교육분과위원회 - 참여예산 홍보 콘텐츠 제작, 자료수집 - 참여예산제 홍보 교육 모니터링 등
3. 참여예산지원협의회 (참여예산네트워크)	30명 (참여예산위원 16명, 전문가5명, 시민단체3명, 협치위원2명, 시의원1명, 공무원3명) - 임기 2년 (참여예산위원의 임기는 조례규정에 따름) -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지원 - 시민참여예산제도 관련 국내외 참여예산제도 연구 -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 및 자문 - 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 공청회 등 활동
4. 예산학교	- 참여예산위원으로서의 기본소양 위주로 교육과정 편성 - 참여예산위원 피추천자격권 부여, 참여예산위원 선정 투표권 부여 - 예산학교 사전교육: 2019년 2월-7월-9월-11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체계



시민참여예산제 사업구분

구 분		사업내용	사업선정 및 사업비
시정 분야	시정참여형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의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해결 사업	153건 351.4억 (2018년)
	시정협치형	사업선정/집행 등 전 과정에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	16건 56.5억
지역 분야	지역참여형	지역사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152건 89.5억
	구단위계획형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에 참여 예산사업을 통합추진	104건 70.5억
	동단위계획형	마을단위 문제해결을 위한 마을계획단 등 발굴 사업	341건 24.6억



총 예산 규모 : 700억 이내 (컨설팅단 운영), 신청기간: 2018.2.12~3.23일
 시정분야: 시정참여형 350억, 시정협치형 100억원
 지역분야: 지역참여형 125억, 구 계획형 75억 이내, 동 계획형 27억

주민참여예산제 비교 평가: 대전시 vs 서울시(2017-2018년)

참여예산기구	충남도(2018)	서울시(2018)
1. 참여예산위원회	40명으로 구성-일반시민15명, 도지사추천-5명, 도의회 5명 (임기 3년-연임가능) - 광역시도단위에서 예산위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음 - 특히 공개모집된 일반시민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전체회의(3회)-분과위원회(4개-2회)-운영위원회 운영(2회) 4개 분과에서 선출된 10명 수준의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됨 47개 사업신청, 8,091백만원 -예산실신청-분류-시군참여예산위-분과위원회심사-전체회의 투표(소규모 200명 참석으로 결정)	300명으로 구성-시민공모 275명, 시장추천(15명) 시의회추천(10명) 10개 민관합치분과(23-28명), 기능분과 - 시정참여행사업(2474건) + 지역참여행사업(1341건)+동지역회의 시정사업(164건) 766개 사업 -593억원 최종선정- 3979건 -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참여자수-예산위원 233명 +일반시민 109,938명(전자투표) + 전문설문기관 선호도조사 200명
2. 예산학교	- 예산학교가 정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진행되지 않음 (1회시행) - 시군단위 순회예산교육으로 대체	- 예산학교가 정기적으로 운영(3월, 5월, 7월, 9월, 11월) - 일반 주민들의 예산학교참여=2000여명 참여-참여예산위원후보
3. 참여예산연구회 참여예산협의회	- 참여예산 연구회는 12명으로 구성 (2회 개최)-지원기능 미약 - 예산관련 이슈들을 항시적으로 체크하고 지원하려는 제도장치 미흡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참여예산협의회'와 같은 민·관 협력기구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서 예산담당관실에 의해 최종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향성이 강하다 - 예산을 총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이 낮음	- 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을 민관합치적 방식으로 운용 - 참여예산 연구회 구성 - 예산관련 이슈들을 항시적으로 체크하고 지원하려는 제도장치존재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민관참여예산협의회'와 같은 민·관 협력기구를 설치-실국단위 - 예산을 총괄 심의 조정하는 기관-지원기관 역할
4. 지역회의	- 시군 예산위원회가 지역회의를 대체 - 지역회의는 지역적 대표성을 보장하고 주민생활현장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지역회의가 구성되지 않음-시군예산위	- 구지역회의(구청 예산위원회) + 동단위 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212회) - 지역회의는 지역적 대표성을 보장하고 주민생활현장의 이해를 대변 - 조례에 지역회의 명시
5. 여론수렴과정	- 예산편성조건, 설문조사, 주민사업제안 신청,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도청홈페이지 및 민원실 방문자 설문 - 주민제안사업 신청 소규모	- 주민이 직접참여하여 선정 (앱보팅-전자투표)-109,938명 - 주민제안사업 신청 대규모 -3979건 예산위원 운영 온-예산설명회, 워크숍, 주민의견서 제출(전체예산에 대한 의견수렴과정)

충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로드맵

영역	주요 지표	세부사항
역량준비	정부역량강화	1.1 예산담당관실 개편-주민참여예산담당팀 구성 (최소3명) 1.2 전문직위제도를 활용-전문직위제 (지속성과 장기적 관점 보장) 1.3 담당관 성과평가개선-장기적 관점과 자치역량강화 관점에서 성과평가 1.4 실·국 및 예산관련자 교육 실시
	시민사회역량강화	2.1 시민예산네트워크 구성-마을,사회적경제,청년,풀뿌리,노동,주창 등등 2.2 예산학교를 통한 시민예산참여역량강화 (1회 6시간 *5회 실시) 2.3 예산네트워크 활동가 양산 2.4 충남도-시군단위(지역예산협의회)-읍면동단위-마을단위
	민관합치역량강화	3.1 민관합치적 관점에서 시민참여예산제 운용 3.2 시민참여예산협의회를 통한 시민개입 및 참여유인-민관공동운영 3.3 시민참여예산제를 위한 WORKING GROUP 구성
제도준비	조례개정	1.1 민관합치적 요소를 도입 (자발적 시민사회역량의 유인)-시민참여예산협의회 1.2 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강화 -협치적 운영, 분과위 역할강화, 시민직접참여확대, 1.3 지역회의의 명문화-시군단위, 읍면동단위, 마을단위 네트워크
	운영체계 혁신	1.1 참여예산의 유형의 정형화(시정, 지역참여, 시군계획, 읍면동계획) 1.2 시민제안사업신청의 다양화 1.3 제안사업 심사체계의 세련화 1.4 사업선정방식의 민주성·합리성 확보-시민참여의 확대재생산
	보조기구활용방안	2.1 예산학교운영방식의 혁신-참여자 층원과 연계, 시민예산네트워크의 주도, 예산확대,정례화 등 2.2 예산연구회-모니터링·평가·feedback을 통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2.3 시민참여예산협의회-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시민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시민참여예산제도 핵심제도개혁 과제 (I)

제도	핵심과제	세부사항
예산위원회	• 납세자의 직접참여확대 • 위원회 규모확대 • 권한확대-심의·결정권보장 • 지속성 및 전문성(회의정례화)	• 납세자(일반시민)의 참여기회확대-공개모집 (90%이상)-단체장추천 축소 • 예산위원회 규모확대-최소 120명(분과위원회, 기능분과위원회 고려) • 예산위원회의 총원요건 (예산학교 이수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초기) • 예산위원들의 예산심의·결정권한을 조례에 명문화 • 예산위원회 회의의 정례화 및 빈번도 확대(전체 연4회, 운영위원회 월1회, 시민공청회 등 주도)
참여예산지원협의회	• 참여예산관련민관협력기구 • 납세자 예산위원회를 지원 • 참여예산제를 총괄·조정	• 참여예산지원협의회를 조례에 명문화-민관협력기구 필요 • 납세자 중심의 예산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 • 참여예산제의 전체를 일상적으로 모니터링, 정책조정, 총괄하는 기구 필요 • 월 2회 정기회의, 세미나, 워크숍 주도 -예산제의 지속적인 개선
핵심내용 • 예산위원회+참여예산지원협의회+예산학교+지역회의 등의 협력구조극대화 (상호 멤버십, 소통 및 회의체계) • 시민참여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민관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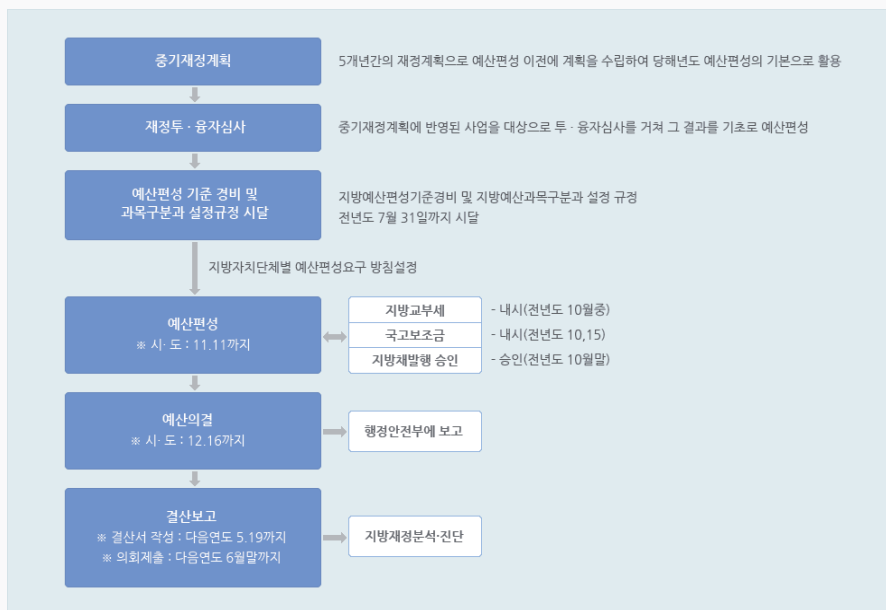
도민참여예산제도 보조제도개혁 과제 (II)

보조제도	핵심과제	세부사항
예산학교	• 예산학교 상설화(년중실시) • 예산피교육자=일반시민 • 예산교육의 내실화-자격, 권한 • 프로그램의 다양화	• 예산교육의 년중실시(년 6회이상)를 통해서 예산학교에 대한 접근성 높이기 • 예산교육대상을 예산위원으로 한정하지 말것 • 예산교육대상을 일반시민주축-예산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활용(최소500이상) • 예산교육내용의 내실화=6시간 (6가지 내용 구체화) • 예산학교와 참여예산위원자격과 연동 지우기 • 프로그램의 다양화=기초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동단위, 구청단위, 시단위
예산연구회	• 참여예산제도의 지속적인 혁신 • 납세자 중심주의 강조 • 참여예산지원협의회 주관	•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모니터링-평가-FEEDBACK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혁신 • 연구회 모임의 정시성 및 지속성 확보 (월1회 이상) • 납세자 중심주의가 관철되는지를 모니터링(개방성,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 •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가 주관
핵심내용 • 예산학교를 통한 시민참여예산위원 확보 및 예산참여역량 확대 • 예산연구회를 통한 지속적인 제도혁신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체계를 위한 과제 (III)

제도	핵심과제	세부사항
시정참여형 협치참여형	- 광역도 문제해결=심사숙의 - 민관협치 사업=거버넌스 - 주민주도의 문제해결역량 - 사회적 학습의 극대화 - 시민의 자치역량의 극대화	- 컨설팅단 운영 - 참여예산사업신청-사업심사(적격성여부심사과정 규정화)-사업심사방식공개 - 사업심사과정 전면공개-현장확인 및 숙의과정(상호학습의 극대화) - 민관협의회-제안자-행정사업부서 = 사업제안서 설명회+숙의 - 우선순위결정과정 체계화=사회적 학습 발생=자치역량
지역참여형 시군단위계획 면동단위계획	- 지역주민 불편해소-생활밀착형 - 시군단위 지역사회혁신 - 마을단위 문제해결	- 지역주민들의 문제 찾기=지역문제관심유도 - 문제해결능력확장=지역단위 주민자치역량강화 - 시군구 참여예산위원회, 주민자치회, 마을계획단 등의 역할분담 - 사업우선순위결정방식 정교화
핵심내용 - 제안사업의 유형화=사업정의 및 목표, 규모, 사업수, 예산배정, 제안 및 선정절차, 일정 - 사업유형에 따른 최적화된 사업방식 찾기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예산주기



죽는 것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납세가 있는 곳에 권한이 존재한다
통치하는 것과 통치 받는 것은 민주주의의 양면이다



의정토론회

주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더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듭니다**

▣ 지정토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적 한계 및 해결 방안과 향후 과제】

이광원 (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 연구교수)

충남도 도민참여예산제도의 현황 및 과제

이광원 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 연구교수

I.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 과제를 선정하여 지방재정 분권 확립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주민의 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이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핵심 정책·사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특히 2017년 11월 1일 대통령 시정연설 가운데 국가재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을 본격 도입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주민참여예산제도(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는 참여정부에서 지방자치 이념에 따라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04년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을 처음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시행되었다.
 - 즉,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된지도 벌써 15여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규모와 기능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기에 돌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학문적 측면에서 그동안의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어떻게 하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적 차원에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운영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하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다.
 - 즉,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두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나온 주민제안 사업이 과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기 전과 비교할 때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가? 또는 지역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가? 그리고 비용 대비 능률적인가?에 대해 질문한다면 사실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 모든 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통한 주민제안 사업 대부분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거나, 단순 민원성 사업에 그치고 있다.

- 따라서 향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속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갖는 근본적인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고, 충남도만의 광역차원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II.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적 한계 및 해결 방안과 향후 과제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적 한계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적 한계로는 ① 대표성의 문제, ② 주민들의 전문성 문제, ③ 주민제안 사업의 중복성 문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대표성의 문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가장 핵심적 참여기구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가 하는 것이다.
 - 충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수는 40여명이라고 한다면, 이들의 성별, 연령, 직업 특성 등에 있어서 과연 충남도 전체 인구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가
- 주민들의 전문성 문제는 주민들이 예산 및 재정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가 또한 충남도 내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 내용과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가 그리고 충남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과 전략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 주민제안 사업의 중복성 문제는 충남도 차원의 예산사업과 시군구 차원의 예산사업이 중복되거나 또는 충남도 내 자치위원회 등 다른 기구에서 얻은 예산지원 사업 등이 중복되어 예산집행에 비효율성이 발생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적 한계 해결 방안

-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에 비교할 때 이와 비슷한 위원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남성과 여성 등 어느 한 성의 차지하는 비중을 규제하거나 연령 측면에서는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 위원회를 구성(방학 중 봉사점수 대체 등 유인방법 모색),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예산편성안을 확정하기 전에 온라인, 충남도 내 유동 인구가 많은 역사 주변 등에서 예산편성 사업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주민들의 전문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며, 충남도 내 시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의 워크숍을 통해 각 지역의 현안과제와 필요로 한 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주민제안 사업의 중복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분과 구성의 확대 및 체계화, 매년 시군구와 협력하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내용을 공유하여 다른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예산사업의 아이디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충남도만의 도민참여예산 모델안 구축

○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안을 살펴보면, 광역과 기초간의 차이가 없다.

- 이러한 점을 인지한 듯 서울시, 충남도 등 몇몇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광역차원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광역차원에서는 지역회의를 구성하기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광범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적이며 어려운 구조이다.

- 따라서 서울시와 같이 충남도 내 시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충남도 도민참여예산제도의 지역회의로 간주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또는 충남도 도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중 도 내 시군구 주민참여예산위

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충남도는 시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 과정과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다른 시군구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통해 충남도 전체 시군구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실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특히, 매 년 분기별로 각 시군구를 순회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과성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 및 예산학교를 통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의정토론회

주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더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듭니다**

▣ 지정토론

**【충청남도민의 참여를 위한
예산학교가 필요하다】**

김상기 (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 간사)

충청남도민의 참여를 위한 예산학교가 필요하다

김상기 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 간사

1. 주민참여예산의 참여는 예산학교부터 시작 된다

충청남도청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의 충남.도민참여예산제 페이지 중 예산교육 안내를 살펴보았습니다. 2019년 찾아가는 예산교육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추진 방향, 운영계획, 교육계획(안)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교육을 통하여 양성된 도민들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와 참여예산 위원회 각 분과별 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 능력 거양하기 위한 심화교육으로의 확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추진방향은 좋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와 참여예산위원회의 전문지식을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학교의 운영계획과 교육계획(안)을 보면 충청남도의 2019년 예산학교 추진방향대로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대상이 시군 참여예산위원회와 희망 도민 등이지만 시군 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교육이 의무사항인 것인지, 희망 도민들이 신청하면 찾아가는 예산학교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교육계획(안)은 3교시로서 1교시 지방예산의 이해 및 충청남도 참여 예산제, 2교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 3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 예산학교의 추진방향인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활성화와 참여예산 위원회의 전문지식 높이기와 교육계획(안)이 맞지 않습니다. 충청남도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충청남도민이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하고, 선정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고, 주민참여예산제가 무엇인지만을 교육해서는 충청남도민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무엇을 하는 위원이 아니라 어떻게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분석하고 선정할 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학교의 대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학교 대상을 충청남도가 희망 도민이라고 한정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 마을계획 참가자, 마을주민 등으로 대

상을 구체화시켜서 예산학교의 교육을 반드시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뿐만 아니라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인이 필수입니다. 예산을 보면 정책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산학교를 원하는 충청남도민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예산을 배우고, 예산 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예산학교가 공동체 교육에 들어가야 합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시범사업인 주민자치회 교육에 주민참여예산과 예산교육을 필수로 진행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반드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이 되었다면, 주민참여예산과 예산교육은 필히 듣게 되는 것입니다.

2.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제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제안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 제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충청남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제안에 대한 교육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산학교에서 교육이 진행되든 별도로 교육이 진행되든 공모사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주민의 공모사업 제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모사업 제안 이전에 교육이 없다면, 주민참여예산 제안 방법과 제안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제안 방법을 알 수 없는 주민이 제안 및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제안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에서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에서는 교육을 신청한 청소년, 청년, 마을, 공동체 등의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가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제안을 교육했을 때 주민들이 가장 어려워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무엇인지가 아닌 제안서 작성 방법이었습니다.

예산학교에서 주민과 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무엇인지를 교육할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방법과 제안서 작성에 대한 추진방향과 교육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전체 충남도민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에서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시민공모제안사업의 2016년~2018년 선정사업을 분석했습니다. 분석결과를 보면 청소년, 청년, 장애인 등과 관련한 주민참여예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청소년, 청년, 장애인 등은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공모사업 제안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청년, 장애인 등도 주민입니다. 주민으로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교육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동일합니다. 청소년, 청년, 장애인 그리고 주민에게 주민참여예산을 알렸다고, 공지했다고 홍보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전체 충남도민을 대상을 진행되어야 합니다.

4.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

대전광역시는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청남도도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 구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해서 모든 업무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민관이 협력해서 진행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충청남도가 예산학교의 기획부터 교육안을 잘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을 위한 교육 강사 양성, 교육 자료 제작까지는 현실적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예산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 구성되어야 가능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교육 대상은 전체 주민이어야 합니다. 한정된 시간에 교육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교육 시간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전, 오후, 주말에 다양하게 교육이 진행되어야 전체 주민이 예산교육이 들을 수 있습니다. 1년 내 수시로 예산학교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가 구성되고,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교육, 토론회, 공청회, 연구 등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정토론회

주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더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듭니다**

▣ 지정토론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바라보며】

김 구 (광석면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바라보며

김 구 광석면 주민자치위원장

예산제도에 있어서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 작은 시골마을의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그동안 실행되었던 참여예산제를 통해 느낀 경험을 토대로 현안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광석면에서는 두 번의 참여예산제를 통한 예산을 배정받았다. 첫 번째 시도는 면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활용하여 지역에 있는 노인과 귀농귀촌인, 다문화가정을 위한 작은 영화관을 설치하여 면민이 함께 하는 공간조성을 기치로 내걸었다. 현재 이 부분은 4천만원의 예산을 배정 받아 작은도서관내 빔프로젝트와 스크린, 사운드등의 시설 설치가 되었으며,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편입시켜 모든 면민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실제 영화를 상영하는 매주 월요일 낮과 저녁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하는 광석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해 나가고 있으니 이것이 진정한 참여예산제의 올바른 실행과 집행이 아닌가한다. 두 번째 시도는 면내 작은 공방을 설치하여 지역내 학생과 마을 주민이 함께 본인의 마을을 꾸미고 가꾸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려고 계획하였다. 공방 내에서 작업에 필요한 기초 시설과 작품등을 만들고 사전에 교육도 진행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공방을 만들고 꾸미는 작업에 관한 토의는 있었으나 결정적으로 공방을 만들 건물이 없어 이 계획은 보류단계에 있다. 참여예산제를 통하여 토지매입부터 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이기에 실행에 있어 초기부터 문제점이 있었던 계획이었다. 계획실행에 있어서의 충분한 사전 검토에 있어서는 아쉬움을 남긴 참여예산 사례였던 듯 싶다.

위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과 효율성은 굳이 더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듯 싶다. 관에서 주도하는 하향식 예산제의 운영에는 한계가 있기에 실질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공감하고 더 나은 삶을 개척하는데 있어서의 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은 현재의 지방자치 제도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듯 싶다.

하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인 참여예산제도의 운용 형태를 보면 보완해야 할 부

분이 많이 있는 듯 싶다. 우선 참여예산제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부족이 눈에 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용자체가 생활과 밀접한 예산이 아닌 보완재의 역할이다 보니 다수의 주민참여가 아닌 주민자치위원등 일부의 인사들에 한해 컨설팅등을 진행하고 그 부분속에서 나오는 대다수의 의견 또한 현재 관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예산집행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실정이다. 또한 허용되는 예산의 범위도 아직 미미하기에 사업진행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체감도도 미흡한 실정이다.

하루아침에 이 모든 부분을 이상적으로 변화를 시킬 수는 없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몇가지 바램을 적어본다.

첫째 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을 위한 교육의 확대와 성공적 사례 발굴 홍보가 절실하다. 삶의 가치가 공동체 속에서 의식발현이 되었을 때 상승한다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러한 것은 다양한 종류의 교육을 통해서 접할 수 있다. 또한 왜 이러한 제도가 필요한지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바뀌고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는 선진지 발굴을 통한 일련의 사례를 통해 주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참여예산제의 운용 예산 대폭 확대가 있어야한다. 보다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현실에 맞고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정도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그러한 실질적 지원이 있을 때 주민들의 관심과 노력도 비례하게 될 것이다. 다만 예산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향후 운영에 관해서는 적절한 감사조치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리더 양성과 주민 인센티브 제공을 건의해본다. 무거운 수레를 한 마리의 말이 끌고 가는것보다는 수십마리가 끌고 간다면 지치지 않고 훨씬 멀리 갈 수 있을 것이다. 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민 홍보와 예산안의 발굴 책정을 위해서는 봉사정신이 있는 지역리더의 양성과 운용이 필요하며 이들의 지속적 활동을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 싶다.

이상으로 현실에서 느껴왔던 주민참여 예산제에 관한 짧은 소견을 남겨보며 앞으로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풀뿌리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희망해본다.

의정토론회

주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더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듭니다**

▣ 지정토론

【충청남도 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이존관 (충청남도 예산담당관)



'19. 7. 8.(월) 15:00
논 산 문 화 원

충청남도 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충 청 남 도
(예 산 담 당 관)

2019년 충청남도 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1 수립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2 2018년 주요 성과 및 아쉬움

2018년 주요 성과

- 2019년 예산안 주민제안사업 반영 실적 : 총 2,934억원 반영

- ① 공모사업 : 사전에 실링 설정, 도민이 제안한 사업 68억원(25건)
 - 도 정책사업 18억원(8건), 시군 소규모 주민밀착지원 사업 50억원(17건)
- ② 주민제안사업 : 사전에 실링 미설정, 도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 232억원(2건)
 -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 7억원, 충남아기수당 지원 226억원
- ③ 일반참여예산사업 : 실국별 자체사업 도민참여예산위 자문 2,634억원(1,434건)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으로 활성화 도모
 - 정책연구개발, 교육, 발표회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 신설
 - 도민의견수렴 확대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 등 참여자 보상 근거 신설
- 제3기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 및 구성 운영
 - 총 인원 : 40명 / 추천 25(도지사 5, 도의회 5, 시·군 15), 공개모집 15
 - 공개모집 확대(기존 10명 → 15명), 여성비율 확대(여성 10 → 18명)

- **광역시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모델 개발 용역 실시('18. 4. 9 ~ 8.9 / 4개월)**
 - 과거 행안부에서 마련한 전국 공통의 운용방식 탈피, 충남도만의 모델 구축
 - 넓은 지역, 다수의 주민간의 의견수렴을 위해 도, 시군 연계방안 마련
 - 광역사무, 기초사무도 아울러 발굴할 수 있도록 절차 등 개선
 - ※ 2019년 도민참여예산제 공모사업 수립계획에 절차개선 사항 등 반영
- **도민참여예산제 공모사업의 광역단위 사무 첫 발굴과 시행**
 - (광역사무)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가입비 지원, 온오프라인 취업, 충남인성교육, 임업인 산림경영 지원 등 8건(18억원)
 - (절차개선) '17년 도 일괄 접수 → '18년 도 정책사업 시군 소규모사업 구분 접수
- **2019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 조사 실시('18. 7. 30 ~ 8. 10 / 12일)**
 - 설문방법 및 참여 현황 : 대상 1,519명, 응답 479명, 31.5%
 - ※ '17년 지출 만족 : 1위 사회복지, 2위 일반공공행정
 - '19년 지출 필요 : 1위 환경, 2위 공공질서안전
- **2018년 도민참여 예산학교 운영('18. 1 ~ 10월 / 10개월)**
 - 운영실적 : 도 및 3시·군(공주, 서천, 예산), 도민 368명 실시

아쉬움

- 공모사업관련 도 정책사업 실링 100억원 중 18억원만 반영
- 도민참여예산제 사업에 대한 피드백 부족, 관심도 미흡
 - '18년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 집행사항 점검 등 미 실시
- 도민참여예산제 운용 설문조사 등 시기 부적합, 조정 필요
 - 주민제안사업 반영률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 항목 및 방식 보완
 - 매년 하반기 설문조사 실시로 인한 본예산 반영 시기 불일치 보완

시 사 점

- 도민(참여예산위원)이 상시 제안하고 사업을 발굴하는 시스템 필요
- 참여예산에 대한 이해 미흡으로 사업 발굴 실적 등 저조
 - 위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선정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 등으로 도민참여예산의 중요성 각인

3 2019년 도민참여예산제 계획

운영 방향

- ◆ 도민이 사업을 제안하고 위원간 심도 있는 토론으로 사업을 선정하여 만족감과 감동을 느끼도록 내실 있게 추진
- ➡ 작은 사항이지만 도민이 지방자치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운영

○ 도민참여예산제 반영 목표액 : 3,500억원

- 공모사업(150억원), 주민제안 사업 및 일반참여예산사업(3,350억원)

○ 도와 시군 역할 구분으로 적합한 사업 발굴 및 활성화 지원

- 도와 시군 구분하여 적합한 도 정책사업, 시군소규모 사업 발굴 추진
- 시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학교, 홍보 강화 등 활성화 지원

○ 도의원, 시군의원간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내실화 추진

- '18~'19년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 현장점검, 모니터링 실시로 피드백 활용

○ 중앙부처(행안부, 기재부) 주요 중점추진과제 적극 동참

- 관련법규 개정 후속조치, 컨설팅, 경연대회 참여 등 활성화 방안에 적극 동참

○ 지난 해 도민참여 예산제 운영 실태 등 분석을 통한 보완 발전 계획 수립

- 예산연구회 자문, 설문조사 결과 반영, 참여예산위원 의견수렴 등 추진

사업선정 체계

○ 사업제안 : 일반도민 + 도, 시·군 참여예산위원

○ 사업선정 : 도, 시군 참여예산위원이 토론을 통해 선정

전년대비 주요 변경 사항

- 전년대비 목표액 상향 : 566억원 증('18년 2,934 → 19년 3,500억원)
- '18~19년 공모사업 현장점검 실시 → 분석결과 활용 '20년 공모사업 기준 마련
- '20년 예산편성 설문조사 시기 조정 : '18년 3분기 → '19년 2분기 추진
- '19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유공자에 대한 도지사 표창 실시(공무원 1)

추진일정 및 계획

【1】추진일정

구분	내 용	일 정
1/4 분기	■ '19년 참여예산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예산연구회)	1월
	■ 2019년 도민 참여 예산제 운영 기본계획 마련	3월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3월
2/4 분기	■ 도와 시·군 참여예산위원, 일반도민 대상 예산학교 운영	4월~10월
	■ 실국별(분과별) 도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최	4월
	■ 2020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 설문조사 실시	4월
	■ 2020년 주민제안사업 발굴 위한 도, 시·군 합동 토론회	5월
	■ 2018~19년 예산반영 주민참여 공모사업 현장점검	6월
3/4 분기	■ 2020년 예산에 반영할 도민 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	7월
	■ 2020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 설문조사 분석	7월
	■ 2020년 실국별 자체사업 분과위별 자문 실시	8월
	■ 2020년 예산에 반영할 공모사업 최종 선정 총회 (도 정책사업, 시군 소규모 주민밀착 지원사업)	10월
4/4 분기	■ 2019년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 도민 참여예산사업 선정 최종보고, 운영 만족도 조사 실시 참여예산제 유공자 표창	12월

※ 상시운영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연구회

【2】추진 계획

< 상시 운영 계획 >

① 도민참여예산 위원회 운영(연중)

- 참여예산위원회 총회 운영 : 연 4회 이상
 - 예산학교 교육, 합동토론회, 공모사업 선정 등 필요 수시 수집
- 분과위원회 활동 : 반기별 2회(연 2회) 이상
 - 실국별 자체사업 편성결과 보고, 사업 우선순위 자문 및 의견 검토
 - 분과위원회별 활동 일정·내용 등은 소관 간사 실국과 협의 운영
- 운영위원회 활동 : 참여예산관련 현안 발생시 수시 개최
 - 구성 : 10명(위원장 및 부위원장 2, 4개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
 - 예산연구회 개최시 참여토록하여 활성화 방안 마련 논의

② 예산 연구회 구성 및 활동(연중)

- 예산 연구회 구성 : 12명(민간전문가 11명, 예산담당관 등 1명)
- 활동 : 참여예산 사업관련 현안 발생시 수시 개최 자문
 - 도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활동 및 효율화 방안 연구 지원
 - 도민 설문지 보완 및 설문 방법 개선 지원
 - 도민 예산 교육 활성화 대책 연구 등

③ 재정 정보 공개를 통한 도민 관심 제고(연중)

- 예산교육, 재정정보 공개 등을 통한 도민의 참여의식 제고
- 「도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 내실 운영
 - 재정정보 공개 : 예산개요, 재정공시, 결산 현황 등
 - 예산편성에 바란다 : 예산편성 제안사업, 건의사항 등 연중 접수
-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 주민 인지도 향상 극대화
 - 지역 언론 적극 홍보 및 SNS 활용 참여예산 홍보의 전환점 마련

< 분기별 추진 계획 >

① '19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기본 계획 수립(3월)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예산연구회 자문 결과를 반영 수립
 - 예산연구회 자문(1월),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확정(3월)

< 예산연구회 자문 내용 >

< 토론사항 >

- 주민참여 공모사업 기준 마련시 2개 시·군 연계사업 우선순위 부여
 - 찬성 : 광역사무에 적합한 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우선순위 부여 필요
 - 반대 : 사업발굴이 다소 한정되어 실패확률 높음(서울시 실패)
단, 사업을 구체화하고 논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절차 필요
- 주민참여 공모사업 중 도 정책사업 발굴 제안자 범위 한정(특정계층)
 - 다수의견 : 특정계층을 구분하여 제안사업 수렴시 타 계층간 형평성 문제 해결 필요,
실국별로 구분된 참여예산 분과위원회에서 제안사업 발굴로 대체 가능.

< 개선 건의사항 >

- 참여예산사업 발굴을 위한 숙의과정 심화를 위한 절차 개선
- 타시도와 비교 부족한 전담인력 증원 혹은 전담조직 마련
 - ※ 2018년 우수기관 : 서울(과 단위), 대구(팀 운영), 경남(팀 운영) / 충남(0.5명)
- 예산학교, 시·군 지원 및 홍보 강화 등 활성화 방안 마련
- 설문조사 추진시 피드백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완

② '19년 실국별(분과별) 자체사업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설명회 개최(4월)

- '19년도 실국별(분과위원회별) 자체사업 편성 결과 현황 설명
- '20년 예산 편성을 위한 실국별 자체사업 의견 수렴 등 실시

③ 도와 시·군 참여예산 위원 및 일반도민 대상 예산학교 운영(4~10월)

- 예산 연구회 회원을 강사로 활용, 시·군 또는 일반 도민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른 별도 운영 계획 수립

④ '20년 예산 편성을 위한 도민 설문조사 실시(4월) 후 분석(7월)

- 2020년도 예산 집중 투자분야 관련 설문조사 계획 및 분석 추진
- '18년도 결산 반영 및 설문 범위 확대·홍보 강화 등 참여 극대화 방안 마련

⑤ 도와 시·군 참여예산위원회 합동 토론회 개최(5월)

- '20년 도 정책사업 추진 계획 등 설명 및 분야별 투자방향 협의
- 대상 : 도, 시군 참여예산위원회(시군별 2명), 관계 공무원 등
- 도민참여예산 사업 중 주민제안사업 분야 발굴 중점 추진

⑥ '18 ~ '19년 사업 현장점검, 모니터링 실시(6월)

- 2020년도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 기준 마련
- 점검단(도, 시군, 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후 문제 사업 위주 중점 점검
-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활용 집행내역, 현실성 등 분석

⑦ '20년 예산 편성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7~9월)

- 2018년 도민참여예산제 공모사업 수정·보완
- 설문조사,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타시도 운영사례 분석 등 활용

⑧ '20년 예산 편성을 위한 실국별(분과별) 자체사업 자문 회의(8월)

- 도민참여예산제 일반참여예산사업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
- 2020년 실국별 자체사업 총액배분제 운영 방안 검토 / 세부내용 불입

⑨ '20년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총회(9월)

- 도, 시군 참여예산위원회가 공모사업 우선순위 최종 선정(전자투표)
- 도 정책사업, 시군 소규모 주민밀착지원 사업 기준 준수

⑩ '19년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12월)

- 2020년 도민참여예산 반영사업 최종보고 및 환류기능 강화
 - 공모사업,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확정 보고
 - '19년 참여예산제 만족도 조사·피드백을 통한 보완대책 수립 보고
 - 2019년 도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유공자 표창(1명 공무원)

4 행정안전부 참여예산제 중점 추진 사항

- 행안부, 기재부 합동 찾아가는 예산제안 설명회 개최(8개권역, 2~4월)
- 도민참여예산제 전문가 컨설팅(3~4월) : 희망 자치단체 실시
- 도민참여예산제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9월)
 - 행안부 서류심사(10개팀) → 경진대회 참가단체 선정 후 우수단체 선정
-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에 1명 구성 추진
 -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매뉴얼 개정 추진
- 지자체 주요사업 중 생활SOC사업 주민참여 의무화 규정 마련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절차기준 권고안 마련
-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참여예산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조직 확충
 - 광역) 주민참여예산 운영 외에도 시군 지원역할 강화토록 팀 구성(2~3명)
 - 기초)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전담인력 1명 이상 확보

→ 행정안전부 세부추진계획 확정 통보시 적극 동참 추진

5 2019년 도민참여예산 사업발굴을 위한 노력

□ 시군 소규모 주민 주민밀착사업 발굴현황

< 그동안 현황 >

○ 참여예산사업 대부분 지역 소규모 주민밀착지원 사업

- 2018년 예산반영 사업 33건, 51억원(도비 30, 시군 21) 발굴
- 2019년 예산반영 사업 17건, 50억원(도비 27, 시군 41) 발굴

※ 세부내역 : 별첨(참고자료 1, 2)

○ 도, 시·군의원 현안사업도 대부분 지역 소규모 주민밀착 사업

- 농어촌도로, 용배수로 정비,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인도개설 등

< 2020년 사업 발굴 >

○ 도, 시군의 의원사업 등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 발굴 노력

- 예시)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사업,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 등

➡ 블루오션(새로운 사업)을 찾아내어 사업 선정, 예산반영 계획

□ 도 정책사업 발굴 현황

○ 2019년 예산안에 도 정책사업 발굴(총 8건, 18억원) / 별첨(참고자료 1)

- 임업인 산림경영 지원, 충남 인성교육, 청소년 양성평등 고취 역량강화 교육,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자살시도자 유가족 마음치유 힐링캠프, 지역민과 함께하는 영화 만들기, 동학사 숙모전 춘향대제 및 동향대제 지원 등

의정토론회

주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더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듭니다**

▣ 지정토론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및 과제】

박찬해 (논산시 참여예산실장)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및 과제

2019년

논산시

- 목 차 -

- I.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 II.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체계
- III.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주요내용
- IV. 논산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방안
- V. 참고자료

I.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연도별 주민참여예산 반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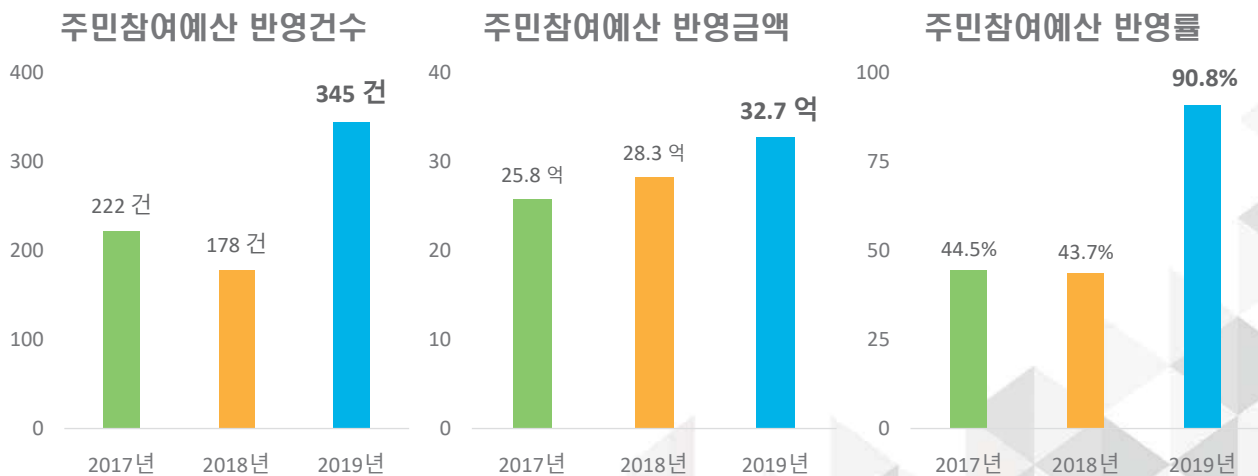
(단위 : 건, 백만원, %)

연도별	요구		반영		반영률 (건수 대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663	101,610	1,663	20,894	62.4
2014년	391	5,187	347	4,541	88.7
2015년	402	23,291	341	4,900	84.8
2016년	584	30,613	230	2,778	39.4
2017년	499	12,470	222	2,578	44.5
2018년	407	25,776	178	2,832	43.7
2019년	380	4,273	345	3,265	90.8

※ **단순 주민숙원형 사업 비율 63% → 16% 대폭 감소**(도로 확 · 포장 및 용 · 배수로 공사 등)



연도별 주민참여예산 주요현황



☞ POINT : 주민참여예산 교육 및 홍보, 컨설팅 등 다양한 노력의 결과 최근 3년간 연도별 주민참여예산 주요현황 지표(반영건수 및 반영금액, 반영률) **최대치 달성**



주민참여예산 반영 세부현황

연번	구분	사업건수	사업비 (백만원)
계		345	3,265
1	市 사업부서	10	573
2	마을자치분권과	126	218
3	강경읍	8	100
4	연무읍	19	157
5	성동면	16	155
6	광석면	14	180
7	노성면	4	53
8	상월면	16	197
9	부적면	23	199
10	연산면	20	272
11	벌곡면	18	158
12	양촌면	10	245
13	가야곡면	16	137
14	은진면	17	229
15	채운면	9	73
16	취암동	7	102
17	부창동	12	219

◆ 주민참여예산 총액 한도
33억원 외 지역별 예산
한도(실링)를 지정하지
않음



◆ 주민 참여가 활발한 지역의
경우 사업비를 많이 확보

주민 참여
동기 부여

II.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체계

비전과 미션

비전

시민이 주인 되는 자치분권 강화 구현

미션

-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 주민자치회 및 마을자치회 등 시민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참여 독려
- 예산 쏠 과정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재정민주주의 실현



반영구조

논산시 의회

예산(안) 심의 · 의결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 제안사업 심의 · 의결

市 사업부서

대상사업 검토

읍면동 지역회의

읍면동 사업 우선순위 결정

마을자치회

마을자치회 사업 동의

시민의견 제출

사업 제안서, 설문조사 등



시기별 운영흐름



Ⅲ.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주요내용

1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지원사업(주민참여예산)

✓ 사업유형 : 주민참여형 사업* (단순 주민숙원 사업 제외)

*문화 및 복지, 경관개선, 역량강화 등

✓ 신청대상 : 1개소 마을자치회 1개 사업 신청

※ 15개 읍면동 489개소 마을자치회 구성

✓ 사업대상 : 각 사업 당 3,000천원 이내

✓ 추진부서 : 마을자치분권과(2019. 1. 25. 신설)



광석면 광리 공예수업

☞ POINT : 주민세(5억 1천만원) 전액 환원 + @를 통한 사업추진

※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구성체계

1. 명 칭 : 00리 동고동락(同苦同樂) 마을자치회
2. 구 성 :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개발위원회+당연직 위원+일반 위원)
3. 임 기 : 2년, 연임 가능
4. 목 적 : 주민 자치권 직접 실현 및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활동 전개



✓ 주요사업



취암동 내13통 사랑의 김장담그기



취암동 취암7통 독거노인 반찬만들기



취암동 취암11통 우리동네 청소하기

✓ 주요성과

- 행안부 주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선도지자체 선정*

*공무원 33명 증원, 인센티브 30,000천원 수령

- 2018년 한국지방정부 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 POINT : 전국 최초 풀뿌리 주민자치 구현 인정





2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 ✓ **참여대상** : 논산시민 누구나
- ✓ **참여방법** : 시 홈페이지, 방문, 팩스, 이메일 등
※ 참여예산실 및 읍면동사무소 상담창구 운영
- ✓ **공모예산** : 65억원(본예산 일반회계의 1%)
- ✓ **공모사업** :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한 주민참여형 사업
- ✓ **참여기간**

- 온라인 : 연중(시 홈페이지(www.nonsan.go.kr) → 소통&참여 → 주민참여예산)
- 오프라인 : 19. 6. 3. ~ 19. 8. 30.(3개월 간)

👉 POINT : **주민의견 수렴 연중 실시(제안사업 접수 및 설문조사 등),
공모예산 전년대비 2배 증가(2019년 본예산 일반회계의 1%)**



3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 ✓ **참여대상** : 논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 ✓ **운영기간** : 2019. 1. ~ 12.
- ✓ **사업대상** : 청소년 정책사업 등
- ✓ **참여방법** : 청소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통한 사업 발굴
- ✓ **운영현황**

- 2019. 1. ~ 3. : 청소년참여위원회 퍼실리테이터 교육
- 2019. 3. ~ 8. : 청소년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2019. 9. : 발굴사업 소관부서 타당성 등 종합검토
- 2019. 10. ~ 11.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및 의결, 예산(안) 편성 및 의회 제출

👉 POINT : **2019년 청소년 참여예산제 최초 운영으로 다양한 청소년
정책사업 등 발굴 기대**



IV.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1 온라인·모바일 활용 참여 확대

✓ 현 황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참여

- (온라인) 시 홈페이지
- (오프라인) 방문, 팩스 및 이메일 등
- (모바일) 참여 불가

✓ 참여대상 : 예산편성 등 예산 쏠 과정

✓ 문 제 점

- 모바일을 주로 활용하는 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함
- 주민참여예산 진행상황 미공개

☞ **활성화 방안** : 온라인 및 모바일 활용 주민제안 활성화 및 참여예산 진행상황 공개



2 주민참여예산위원 참여 확대

✓ 현 황 : 예산편성 과정의 참여

✓ 주요기능(위원회)

-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심의·의결

✓ 문 제 점 : 지방재정제도와 연계 미흡

☞ 활성화 방안

- 투자심사 시 주민참여예산위원 1인 이상 참여 의무화
 - 분과위원회 구성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강화
- ex) 1억원 이상의 쏠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등 기능 수행





3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및 교육 강화

- ✓ 제도현황 : 2013년 ~ 2019년 (7년째 운영)
- ✓ 문제점 : 주민참여예산제 인식 및 참여 저조
- ✓ 추진경과 : 홍보 및 교육 등 실시
 - (홍보) 현수막, 홍보자료, 포스터 및 리플릿 배부
 - (교육) 주민참여예산학교, 업무관계자 교육, 컨설팅 등 실시



☞ 활성화 방안

- 인터넷, SNS, 지역방송 등 시민 친화적 홍보수단 적극 활용
-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주민총회, 이장단 회의 등)
- 민주시민학교, 타운홀미팅 등을 활용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V. 참고자료

분야별 주요사업

구 분	내 용
홍 보	▪ 지역 브랜드개발, 스토리텔링, 홈페이지제작, 마을소식지 만들기
편 의	▪ 자전거 대여소 운영, 청소년 공간 조성, 인터넷 카페 조성
교 육	▪ 장학사업, 방과 후 학교 숙제도우미, 전통 유교문화교육 ▪ 찾아가는 문화강좌, 학교폭력 예방 교육, 농어촌 정보화 교실
복 지	▪ 사랑의 국·찌개 사업, 사랑의 빨래방 운영, 마을돌봄센터 운영
환 경	▪ 쓰레기정비, 하천복원 (도랑살리기), 산책로정비, 간판 정비 ▪ 걷고 싶은 거리(추억의 거리) 조성, 담장 정비, 꽃길만들기
인구증가	▪ 귀농 귀촌의 집, 쉼어하우스, 귀농귀촌 멘토제
역량강화	▪ 주민자치위원회 책자 발간, 채운 아카데미 운영, 역량강화 워크숍



<주민참여예산 발표대회>



<주민참여예산 발표대회>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